전북도의회 상임위 추경 심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차단선 훼손 대책을"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 농업기술원 추경 심사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개최,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우선 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95억9,000만원보다 1,497억원이 증액된 6,793억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66억7,000만원보다 1,530억1,000만원이 증액된 9,496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8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469억1,000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7억2,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증액된 5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차단선이 태풍과 장마로 인해 훼손된 경우가 많은데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예방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임에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사업대상업체 선정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사업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드론 방제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농업용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누락됨 없이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동네서점 바로대출 프로그램, 모범사례로"

교육위, 도내 6개 시 교육지원청 등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7일 12개 직속기관과 6개 시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축소,운영됨에 따른 감액 예산이 주를 이뤘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과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들이 많다"며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의 깊게 검토 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실효성 없음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업이란 이유로 호응 없는 프로그램을 여전히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며 "활성화가 불가능한 온라인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접고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며 관행적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계획과 다르게 축소 진행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하면서 관련 진행비는 그대로인 것들이 다수"라며 "운영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운영비예산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들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 임금,후 진행'과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직속기관의 경우 대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고민의 흔적 없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론만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됐고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이기에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글로 생각을 표현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에 맞는 영상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북캉스가 유행인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의 경우 회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의 취지를 동의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회관이용자가 원하는 도서 수요가 즉각적으로 만족될 뿐만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챙기는 서비스"라며 "많은 곳도 이처럼 피부와 와닿는 아이디어로 힘든 시기에 학생과 지역민들에게 힘이되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및 1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8일 계수조정을 거치고 이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폭우 피해 지원 위한 응급복구비 배분을"

문건위, 도민안전실 소관 심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제375회 임시회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의 증액의 필요성 강조했으며 신규 추진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가 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여름철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이나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영업 사례를 언급하며 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특히 "특사경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번 지적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특사경 인원 증원과 더불어 여름철 하천 및 계곡 불법영업에 대해 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단속 및 대책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시,군별로 3개지구가 감액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침수나 붕괴 및 재해 취약 지원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 대책을 세워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일부 시·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어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또한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경보시스템은 시,군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의 적은 예산의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도 축산분뇨 및 악취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고자 7일 익산, 김제시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환복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북도 축산분뇨 및 악취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고자 7일 익산, 김제시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지인에게 전북의 첫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어 왔던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를 방문,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축사 매입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처리시설 및 주교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0년 '익산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왕궁리 현업축사 매입사업과 함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어 위원들은 전북 혁신도시 악취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김제시 용지면을 방문, 마을축사를 둘러보고 배출저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악취저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생활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악취저감사업을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도의회는 각종 사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정책점검과 더불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과제 선정 '1~2년 단기'에 편중

도의회 행자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3년간 '나~다'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가'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이 불철주야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평가등급 외에 수치화된 평가점수 또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이 1~2년의 단기적인 과제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중장기적 기획과제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로 드러난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환류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경영평가용역이 실제 신뢰성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등 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도 중복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평가업무 과중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토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환노위 청원심사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7일 환경노동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윤 의원은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소관 청원 사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의원 발의를 통해 시 농어업인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보상금 지원한도는 최대 70만원까지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주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문제 해결

민주 한병도 의원,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면서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호상 기자

국가 재정 지원 강화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

민주 이원택 의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율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유호상 기자